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쉽지 않을 듯

박근혜 정부 이후 7년만에 거부권... '국가 재정부담 크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어서다.

다만 법안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

실상 부결 가능성이 큰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학용·윤재옥 '2파전'

친윤 대결 구도...지도부 지역 안배론·대야 협상력 등 변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화 하고 있다. 4선의 김학용(경기 안성)·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의 '2파전'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친윤' (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경선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 승리를 목표로 원내 전략을 이끌 책임자를 가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최대 승부처인 수

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 "2030·중도층 지지층 확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남권 당 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이라며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자신이 '상호 보완'의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경우 최근 여론에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TK(대구·경북) 확대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거론된다.

윤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출마 회견문 초안에서 "각자도생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말했다.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천'과 관련해 원내대표 선거 유권자인 의원들 표심에 호소할 것이다.

이번 경선은 선거 당일까지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판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찌감치 득표전을 벌여온 당사자들도 극도로 말

을 아끼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경선은 '유권자'인 현역 의원들의 마음속을 읽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가벼운 처신으로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정쟁이 산적한 4월 임시국회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 관련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전원위원회가 당장 내주 1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원정수 확대 등 민주당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후보자들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입장 개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원내수석부대표 후보군에는 김정재 임이자 이양수 등 재선 의원 이름이 여럿 오르내린다. 당 관계자는 "원내수석부대표야말로 원내대표 당선인과의 지역 안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7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후보자들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입장 개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원내수석부대표 후보군에는 김정재 임이자 이양수 등 재선 의원 이름이 여럿 오르내린다. 당 관계자는 "원내수석부대표야말로 원내대표 당선인과의 지역 안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7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임 대통령 퇴거 시점 논란 사라지나

여야, 취임 시점 '취임식 당일 0시'서 '선서'로 개정키로

여야는 4일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관저 퇴거 시점 등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 총 7개 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

선인 측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